녹색도시 실현 위한 정책적 방안 강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
2021.7.22.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2021.8.25.

경기도, 신축 공공건축물에 친환경기술 설계 기준 강화, 적용

경기도가 경기도서관을 비롯해 도가 추진 중인 신축 공공건축물 19건에 적용해야 하는 친환경기술 설계를 기준 법령보다 강화해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령에서는 연면적 1,000m² 이상(녹색건축인증은 3,000m²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기술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2019년 1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그 기준을 500m²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경기도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심의를 진행한 총 19건의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기준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 연면적 1,000m² 미만의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친환경기술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여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30% 이상 등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 친환경기술 설계 기준

구분	법령(의무) 기준		경기도 조례 기준	
	대상	적용기준	대상	적용기준
녹색건축인증	3,000m² 이상	그린4등급 이상	500m² 이상	그린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1,000m² 이상	1++등급 이상	500m² 이상 ~1,000m² 미만	1등급 이상
			1,000m² 이상	법령 기준 적용
신재생에너지공급	1,000m² 이상	30% 이상	500m² 이상	30% 이상

출처: 경기도. (2021). 도, 경기도서관 등 신축 공공건축물 19건 친환경기술 강화 설계-녹색건축물 도입 선도. 7월 22일 보도자료.

경상남도,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기후위기 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경상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 차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영향평가제는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기후인지예산제도 함께 도입된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위기 영향평가 점검항목 개발 및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마련 ▲예산 분류 및 목록화,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산출 기초 마련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인지예산제 근거 마련 등 제도화 방안 도출을 주요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당초 예산 편성부터 새로운 제도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2021년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정책 사업(1만 3,479개)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2,946개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영향과 기후친화적인 환경목표 기준으로 기후친화사업, 기후부정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기후중립사업*으로 분류하고 사업마다 점검표를 작성하여 자체 평가와 분석을 할 계획이다.

* · 기후친화사업: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
· 기후부정사업: 개발행위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 기후잠재영향사업: 기술적용과 사업 방향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영향이 있는 사업
· 기후중립사업: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의 영향이 없는 사업